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28

2024/8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이서희·황수연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07)

Contents

국제기구/ 국제규범

유엔인권위원회(UNHRC) 2
UNHRC 유엔인권위원회, 선원의 인권 향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결의안 채택

세계식량농업기구(FAO) 4
FAO FAO 제36차 수산위원회(COFI) 개최
어업의 경제적 이익과 식량권 균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지역별 동향

아시아 12
일본 일본, 제10차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10) 개최와 합의
중국 중국, 동아시아 해역에서 우방국과 잇따라 해상 연합훈련 시행

북아메리카 17
미국 Quad 외교장관 회의, 해양영역인식·사이버 안보 협력 등 논의

아프리카 20
소말리아 바다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싼 소말리아-에티오피아 갈등, 튀르키예가 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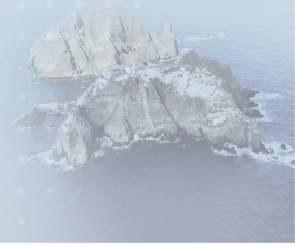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인권위원회

UNHRC

전문연구원 김 지 혜

유엔인권위원회, 선원의 인권 향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결의안 채택

지난 7월 11일 유엔인권위원회는 표결 없이 ‘결의안 56/18: 선원의 인권 향유 증진 및 보호’를 채택했다. 선원에 관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원의 인권 문제는 노동 문제와 함께 주로 국제노동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서 다뤄왔다. 6월 25일 ‘선원의 날’을 맞아 필리핀과 12개국¹⁾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의안은 모든 선원들의 안전하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 및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과 선주 및 선원 대표들이 2006년에 개정된 IMO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결의안은 선원의 기본권 외에도 선원들이 고위험 해역으로의 운항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것이 선원의 고용 경쟁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선원들의 근무 여건 악화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75/17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선원 등을 ‘주요 근로자(key worker)’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유엔인권위원회는 해양산업 관련 기업들이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의 책임 원칙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국가들이 보장할 것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성평등과 여권 신장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폭력과 추행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조치·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전 세계 선원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선주 및 선원 대표, 국제노동기구, 국제해사기구, NGO,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조약 기구, 유엔인권위의 특별절차 등에서도 각 업무범위에 따라 선원들의 인권 향유를 진시키고 보호하는 이슈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1) 방글라데시, 벨기에, 덴마크*, 에콰도르, 조지아,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영국*(*)는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이 아님)



정책적 시사점

선원의 인권에 관한 결의안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소개되고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선원 인권을 포함하여 해양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인권기구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선원의 인권과 노동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수산기구에서는 강제노동을 IUU 어업과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 전경



그림 출처: 필리핀 외교부(2024.7.11.)

출처 : [1] UNHRC,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by seafarers」 (A/HRC/56/L.4)
[2] 해양수산부, 2024,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전문연구원 황수연

FAO 제36차 수산위원회(COFI) 회의 개최

FAO 제36차 수산위원회(COFI) 회의 개요

2024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제36차 수산위원회(COFI)²⁾ 회의(36th Session of the Committee on Fisheries)’가 개최되었다.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회원국 수산 및 양식업 정책 입안자, 전문가, 파트너가 국제 어업 분야에서 효과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FAO 제36차 수산위원회에서는 식량 안보 위기, 영양실조, 빈곤 대처에 있어 수산 및 양식업의 역할과 기아 해소 등 노력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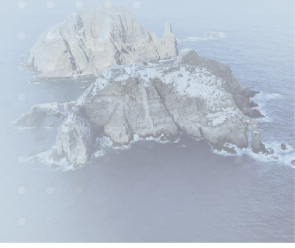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2. FAO 제36차 수산위원회 회의 모습



그림 출처: FAO
홈페이지(2024.8.12.)

위원회는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에서 수산 식품의 역할, 기후변화 해결책으로서의 잠재력, 장기적인 생물다양성 목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의 기여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과 같은 수산 식품 시스템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의 해결책과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 수산위원회(COFI)는 FAO 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 FAO 회원국의 수산 및 양식업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 정부 간 포럼이다. 일반적으로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어업 및 양식업과 관련된 현재 문제 및 해결 방안 논의, 진행 상황 검토, 미래 작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수산위원회는 정부, 지역 어업 기관, 시민 사회 조직, 민간 부문에 주기적으로 글로벌 권장 사항과 정책 조언을 제공한다.



FAO 제36차 수산위원회(COFI) 의제별 주요 내용 및 제안 조치

〈2024년 세계 어업 및 양식업 현황(SOFIA 2024)과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 강령³⁾ 및 FAO의 관리하에 있는 SDGs 14 지표〉 의제에서는 SOFIA 2024⁴⁾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다른 SDGs와의 시너지 효과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어업 및 양식업의 기여를 강조했다.

SOFIA 2024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어업 및 양식업 생산량은 2억 2,320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비율은 2021년 62.3%로 2019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수산물 활용 및 가공 과정 개선을 통해 2021년에는 어획량 중 89%를 인간이 소비했다(1인당 수산물 소비량 20.6kg). 수산 식품은 인간의 총단백질 공급량의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수산업 및 양식업〉 의제에서 위원회는 해양환경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FAO의 ‘버려지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일명 유령어구)’ 예방 및 저감 활동에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각 회원국 수산 전문가의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⁵⁾와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⁶⁾ 및 ‘해양 오염 방지 대응 전문위원회(PPR)’⁷⁾의 해상에서 어구 유기 및 폐기 방지를 위한 논의 등 어구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의제에서 위원회는 FAO의 IUU

- 3)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nd Related Instruments
- 4) SOFIA 2022의 부제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을 향해서’에 이어 SOFIA 2024의 부제는 ‘작동 중인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이며, SOFIA 2024의 1부에서 세계 수산물 현황을 검토하고, 2부에서 국제 차원, 지역 차원에서 추진 중인 블루 트랜스포메이션(Blue Transformation) 이행 현황을 설명하며, 3부에서는 FAO 전망을 바탕으로 2032년까지 미래 동향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5)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2024년 11월 23일~12월 1일, 부산)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업 및 양식 장비와 ALDFG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 초안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제3차 및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일부 국가는 관련 조항을 제안하고 어구 수명 주기 및 기존 오염 수준을 고려한 어업 및 양식 장비를 다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다른 국가는 협약 초안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 6)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의 해양오염 방지협약 제5부속서(MARPOL Annex V)에 따른 어구 표시에 대한 ‘목표 기반 요구사항’ 개발 결정(2022년 6월)에 따라 구속력 있는 어구 표시(gear marking) 규정의 가장 빠른 예상 발효일은 2028년 4월이다.(2025년 협약 개정안 해양오염 방지 대응 전문위원회(PPR) 제출, 2026년 PPR에서 협의 마무리 및 MEPC 채택, 채택 후 16개월 발효를 가정함)
- 7)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 방지 대응 전문위원회(PPR: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 이행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고, 이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회원국에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 이행과 당사국 가입, 국내 및 국제 수준의 기관 간 협력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FAO IPOA-IUU)' 이외에 연안국에 외국 선박의 자국 EEZ 내 어업 활동 모니터링 및 규제 책임을 규정한 전용 국제규범은 부재하며, 현재는 양자 협정을 통해 규제하거나 단속되지 않는 IUU 어업이 자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외국 선박의 연안국 EEZ 내 운항 허가 조건 및 활동 모니터링·규제 조건을 국제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표 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 관련 국제규범 현황

국제규범	연도	구속력	책임			
			기국	항만국	연안국	시장국
FAO 규정 준수 협정 (FAO Compliance Agreement)	1993 (발효)	○	○	○		
경계양래어족 및 고도화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UN Fish Stocks Agreement(UNFSA)	1995 (발효)	○	○	○	○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FAO IPOA-IUU)	2001		○	○	○	○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PSMA)	2009 (발효)	○	○	○	○	○
기국 이행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FAO Voluntary Guidelines for Flag State Performance, VGFSP)	2014		○		○	
어획 보고 체계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FAO Voluntary Guidelines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VGCDs)	2017		○			○
어구 표식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FAO Voluntary Guidelines for the Marking of Fishing Gear)	2018		○	○	○	
환적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FAO Voluntary Guidelines for Transshipment)	2022		○	○	○	
WTO 수산보조금 협정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2022 (미발효)	○	○		○	

표
출처:
FAO
자료
참고해
저자
작성

그 외 위원회는 <FAO 전략에 따른 FAO의 어업 및 양식업 작업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식량 안보와 영양에 있어 수산업과 양식업의 역할>,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 해결책으로서의 수산물>,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협약의 어업 및 양식업에 대한 의미> 등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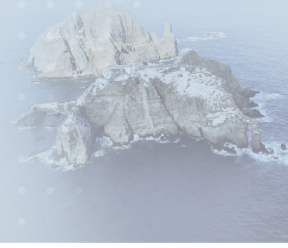


정책적 시사점

제36차 FAO 수산위원회의 핵심 사항은 수산 식품의 식량 안보에 기여, 해양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피해 저감 및 관리, IUU 어업 근절을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자원량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들이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밖에 향후 다양한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서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의 국내 및 국제 수준의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수산 식품의 식량 안보 기능 강화, 해양플라스틱 오염의 대응, IUU 어업의 근절,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영향 저감 대책 수립, 국제협력 강화 등 수산업이 안고 있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출처 : [1] FAO 홈페이지 <https://www.fao.org/fishery/en/meeting/41443>(검색일: 2024.8.12.)
[2] FAO 홈페이지 <https://www.fao.org/newsroom/detail/global-meeting-focuses-on-fisheries-s-vital-role-in-food-insecurity-malnutrition-and-poverty/en>(검색일: 2024.8.12.)
[3] 2024년 세계 어업 및 양식업 현황(SOFIA 2024)과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 강령 및 FAO의 관리하에 있는 SDGs 14 지표(COFI/2024/2)
[4] FAO,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수산업 및 양식업(COFI/2024/10) [5] FAO,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COFI/2024/13)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전문연구원 황수연

어업의 경제적 이익과 식량권 균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FAO 블루 트랜스포메이션(Blue Transformation) 로드맵(2022-2030)

전 세계에 만연한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세계 식량 시스템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산물은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향한 진전과 기아 종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영양 식품 공급, 양질의 고용, 성평등 및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2022년 FAO가 발표한 '블루 트랜스포메이션(Blue Transformation) 로드맵'(이하 '로드맵')은 인권과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다. 로드맵은 수산 식품 시스템을 확대하고 영양가 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한 식단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특히 어업과 양식업에 의존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위해 환경 관리 및 포용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이니셔티브이다.

그림 3. SDGs와 FAO의 전략 프레임워크에 수산 식품 시스템의 기여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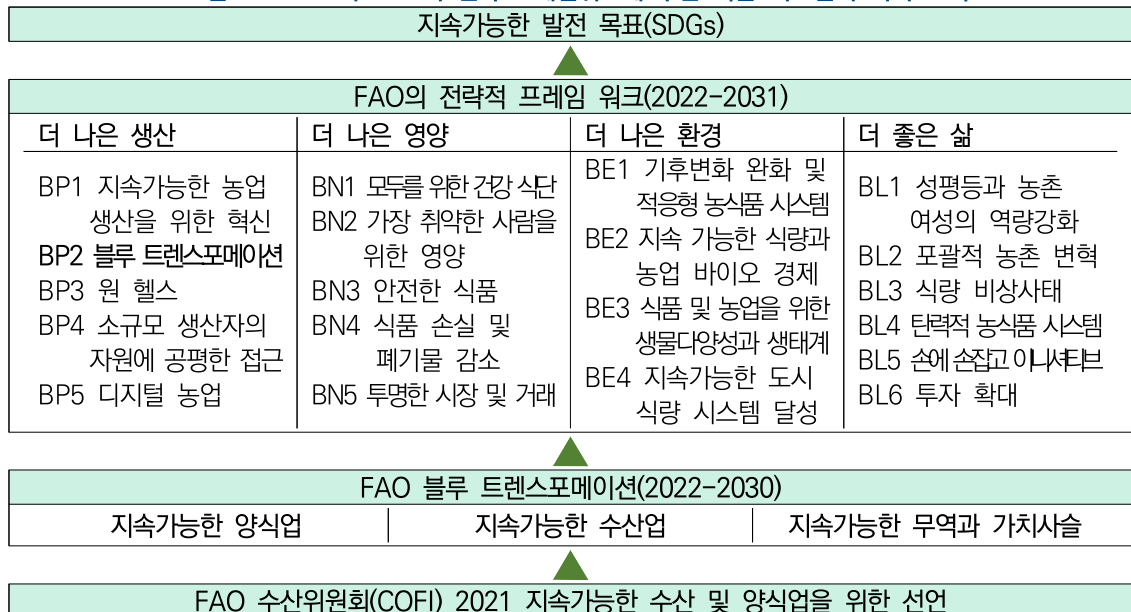


그림
출처:
FAO
자료
참고
작성

8) 수산 식품 시스템은 원산지에서 수산물의 생산, 집합, 가공, 유통, 소비 및 폐기와 관련된 모든 행위자, 행위자 간 상호 연결 부가가치 활동을 포괄한다.



로드맵은 <FAO 수산위원회(COFI)의 2021 지속 가능한 수산 및 양식업을 위한 선언> 및 <FAO의 전략 프레임워크(2022~2031)>와 궤를 같이하며,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UN SDGs)에 대한 수산물 시스템의 기여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블루 트랜스포메이션과 수산 식품 시스템은 ① 증가하는 인구를 위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충분한 수산물 공급 지원, ② 모든 인류,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수산물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식품 손실과 폐기물의 저감, ③ 취약한 지역사회의 생계 보장 권리와 소득 개선에 기여, ④ 수산 식품 시스템의 탄력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 목적과 우선순위 조치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은 양식업, 수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목표와 성과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우선순위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FAO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 목적과 우선순위 조치

구분	내용
양식업	목적
	성과물
	우선순위 조치
	목적
수산업	목적
	성과물
	우선순위 조치
	목적
가치사슬	목적
	성과물
	우선순위 조치
	목적

표
출처:FAO
자료
참고
작성



인권이사회 특별보고서 「기후변화 상황에서 어업과 식량권」 (2024)

인권이사회 식량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파리크(Michael Fakhri)는 보고서 (2024)에서 FAO가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과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기아율 증가와 소비율 증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별보고관은 FAO가 양식 생산량 증가를 통한 기아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재 기아와 영양실조의 주요 발생 원인은 식량 부족이 아닌 정치적 붕괴와 제도적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에 특별보고관은 식량 시스템 내에서 생계를 위한 소규모 어업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므로 소외집단 참여적이며 협력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소외집단 식별, 가공, 판매를 포함한 수산 식품 가치사슬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소규모 어민에 대한 국가별 상황별 대응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특별보고관은 해양환경 보전, 어업 자원의 활용에 대한 규제나 재량을 부여하는 국제규범과 국제기구 프로그램이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소규모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예를 들면 유엔해양법 협약에 국가는 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복원되도록 보장할 의무(협약 제61조 2항 및 3항)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동시에 협약에 “관련 환경 및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어획량 보다 높거나 낮은 비율로 수확할 수 있다는 유연성(협약 제61조 3항)을 제공하고 있어 수십 년 동안 대부분 국가가 남획가능한 방식으로 협약을 해석해 왔음을 지적한다. 또한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미발효)이 발효 되어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이나 기타 지역 기반 관리 도구가 설정되면, 더 많은 개도국의 어업은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는 지역 식량 안보를 위협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부 국가에서 ‘어업의 권리 기반 접근방식(rights-based approaches to fisheries)’⁹⁾을 개발하고 시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규모 자본가의 어업권 매수로 오히려 어장에서 소규모 어업인을 몰아내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았으며, 인권 침해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소규모 어업인은 비공식적 시장에서 일하고 있어 IUU 어업 규제 실행 과정에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소규모 어업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9) 기존 공동 어업 및 소유권 제도를 어업 지역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총허용어획량 중 일부를 집단이나 개인에게 할당하고 해당 권리의 양도 또는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책적 시사점

국제규범 형성 목적 중 하나가 식량 안보와 문화적 가치 보호를 포함한 기타 사회경제적 목표 지원이다. 식량 공급과 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소규모 어업과 원주민의 관습 어업을 보호하는 데에 인권 존중, 지역 기반 관리 및 이행하는 경우에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FAO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 식품 손실과 낭비 저감, 지속 가능한 소규모 어업 확보를 위한 자발적 지침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소규모 어업인과 원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1] FAO, 「Blue Transformation Roadmap(2022-2030)」 2022 FAOchinamil.com.cn/ARMEDFORCES/Navy/News_209162/16311858.html

[2] 「 Fisheries and the right to food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Michael Fakhri)」 (A/HRC/55/49)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황수연

일본, 제10차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10) 개최와 함의

제10차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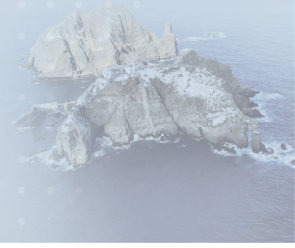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제10차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10: the 10th 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이하 PALM10)¹⁰⁾가 2024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 14개국, 프랑스령 2개 지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9개국 지역 정상과 '태평양 제도 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¹¹⁾ 사무국장이 참가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은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 성과로 「제10회 태평양·섬 정상 회담 정상 선언」과 부속 문서인 「제10회 태평양·섬 정상 회담 공동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PALM10에서 일본은 태평양 제도 포럼(PIF)의 「2050년 전략」 중 '① 정치적 리더십과 지역주의, ②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개발, ③ 평화와 안전보장, ④ 자원과 경제개발, ⑤ 기후변화와 재해, ⑥ 해양과 환경, ⑦ 기술과 연결성'을 중점 분야로 정하고 향후 3년간 개발협력과 인적교류를 통한 이행 지원을 약속했다.

그림 4. 제10차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10) 모습



그림 출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2024.8.13.)

- 10) 일본은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3년 주기로 개최하며 팔라우, 투발루 등 남태평양 16개국 지역 정상과 호주와 뉴질랜드의 장관급 인사가 참가한다.
- 11) PIF 회원국은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이다.



PALM10 공동 행동 계획 주요 내용

지역 안보 네트워크 강화: PALM 파트너는 국가 주권 존중을 기반으로 국방 교류를 강화한다. PALM 파트너는 일본 자위대 항공기 및 선박의 태평양 기항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해양 안보 및 해양 안전 역량 강화: PALM 파트너의 해안경비대 역량 구축을 위해 일본 해안경비대 이동 협력팀(MCT: the Mobile Cooperation Team) 파견을 통한 항법 해도 개발 역량 구축, 일본과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의 해양 영역 인식(MDA) 기술 협력, 어업 및 해상 훈련 기관 개발을 통해 협력을 계속한다. 또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기술 협력과 일본의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인 '공식 안보 지원(OSA: Official Security Assistance)'을 통해 해양 안보와 해양 안전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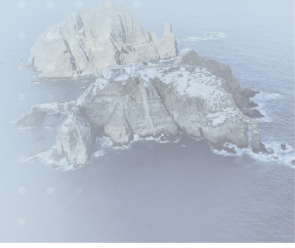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지역 산업 발전 촉진: PALM 파트너는 해외 어업을 통해 선박 공급, 수산 시설의 재활·유지, 지역 어업 및 관광 등 관련 부문에 대한 지원 등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일본해외수산협력재단(OFCF: Overseas Fishery Cooperation Foundation of Japan) 및 JICA 사업을 통해 참치 자원 활용 향상을 위한 집단적이고 포괄적인 투자 경로를 식별하는 'East New Britain Initiative(ENBi)¹²⁾'을 지원한다. PALM 파트너는 일본과 PIF 회원 간 어업 협정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개발을 목표로 하는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정책적 시사점

일본은 태평양 도서국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개방적인 태평양 확보를 위해 태평양 지역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항만 접근 개방,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종식, 인도-태평양 지역 우군 확보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 국가와 협력 강화, 세부 협력 방안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출처 : [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a_o/ocn/pagewe_000001_00022.html(검색일: 2024.8.13.)
[2]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_o/ocn/pageit_000001_00898.html(검색일: 2024.8.13.)

12) East New Britain Initiative(ENBi)는 태평양도서국가포럼 수산기구(FFA) 회원국의 지역 참치 가공 허브 및 부가가치 이니셔티브 개발을 통한 참치 자원 활용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 현 욱

중국, 동아시아 해역에서 우방국과 잇따라 해상 연합훈련 시행

중국이 최근 캄보디아, 러시아 등 우방국과 잇따라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시행하며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Sihanoukville) 근처 해역에서 ‘골든 드래곤(Golden Dragon)-2024’ 연합훈련을 시행했으며, 7월 초와 중순에는 러시아와 연이어 대한해협·동중국해·남중국해 일대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그림 5. 중국·캄보디아 ‘골든 드래곤-2024’ 연합훈련



그림 출처: Global Times(2024.5.19.)

중국-캄보디아, ‘골든 드래곤’ 최초로 해군 공동 실사격 훈련

골든 드래곤은 2016년에 시작된 중국과 캄보디아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으로, 양국의 관계 증진과 군사력 강화 및 경험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합동 대테러 작전 및 인도적 구호’를 주제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양국이 해군이 최초로 해상에서 공동 실사격 훈련을 시행해 최근 동아시아를 둘러싼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방증했다. 해상 훈련에는 중국 함정 3척을 포함해 총 14척의 함정과 헬리콥터 2대가 동원되었다. 환구시보(Global Times)와 프놈펜 포스트(The Phnom Penh Post)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훈련을 위해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의 해군과 육군 300명 이상을 Type 071 상륙함을 통해 캄보디아로 파견했고,



함정과 장갑차 총 500척/대 이상을 동원했다. 합동 지상 훈련에 동원된 병력은 중국군 760명, 캄보디아군 1,31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밖에 올해 훈련은 최근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두고 빈번하게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어 더욱 시선을 끌었다. 골든 드래곤-2024 직후인 6월 4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도 최근 남중국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오스틴 장관은 캄보디아 훈 마넷(Hun Manet) 총리와 테아 세이하(Tea Seiha)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캄보디아 내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림 6. 중국과의 연합훈련에 동원된 러시아 해군 호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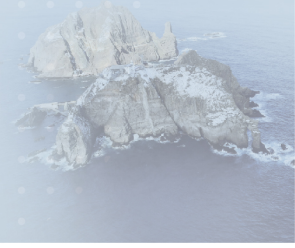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출처: VOA(2024.7.15.)

중국-러시아, 해상 합동훈련 잇따라 시행

한편, 중국 해군은 7월 3~5일 제주도 인근 대한해협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과 제4차 해상 연합순찰을 시행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동해 포키노(Fokino)에 본부를 둔 소버셰니(Sovershennyy) 호위함이 이번 훈련을 위해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 함정 3척 대열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중국 함정 3척은 모두 남중국해 인근 잔장(湛江)에 본부를 둔 남부전구(南部战区) 소속이다.

양국 해군은 제주도 근처에서 합동 순찰을 시작한 후 일본 규슈 인근 오수미 해협을 통과했다. 또한 대한해협 주변에서 합동 순찰을 마친 뒤에는 필리핀 주변 해역으로 이동해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 해상·공중·사이버 동시다발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종료된 직후 이뤄져 진영 간 대결 국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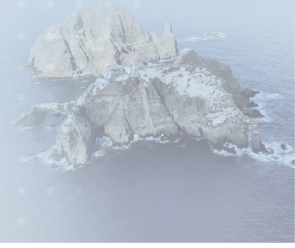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7월 15~17일에도 서태평양 등지에서 ‘해상 연합(Maritime Interaction)-2024’ 훈련을 실시했다. 해상연합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가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연례 연합 해상훈련으로, 그동안 주로 서해(황해)나 러시아 극동 해역 주변에서 훈련을 진행해 왔다.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제로 한 올해 훈련에서는 공동 정찰, 조기경보, 공동 수색 구조, 공동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등 다방면의 군사 연습이 진행되었다.

더욱이 이번 훈련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7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 시작되어 전 세계 안보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이 공동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약화하고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출처 : [1] China Military(2024.5.28.), Chinese, Cambodian sailors conduct maritime live-fire drill during "Golden Dragon-2024" joint exercise, http://eng.chinamil.com.cn/ARMEDFORCES/Navy/News_209162/16311858.html
 [2] Global Times(2024.5.19.), China, Cambodia proceed with joint land, naval exercise, <https://www.globaltimes.cn/page/202405/1312589.shtml>
 [3] Newsweek(2024.7.4.), Russia and China Launch Warship Patrols Around US Allies, <https://www.newsweek.com/russia-china-navy-patrol-east-china-sea-korea-japan-1921187>
 [4] USNI News(2024.7.5.), Chinese, Russian Joint Warship Patrol Begins in the Pacific, <https://news.usni.org/2024/07/05/chinese-russian-joint-warship-patrol-begins-in-the-pacific>
 [5] VOA(2024.6.4.), 미 국방장관, 캄보디아 방문…“캄보디아 내 중국 군 활동 우려”, <https://www.voakorea.com/a/7642019.html>
 [6] VOA(2024.7.15.), 러중, 17일까지 서태평양 등지에서 해상연합훈련, <https://www.voakorea.com/a/7698486.html>
 [7]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2024.7.18.), 中俄“海上联合-2024”联合演习闭幕, <http://www.mod.gov.cn/gfbw/jsxd/16325292.html>



북아메리카 미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Quad 외교장관 회의, 해양영역인식·사이버 안보 협력 등 논의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참가국인 미국·일본·호주·인도가 7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쿼드는 이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협력 강화를 목표로 결성한 협의체다. 2004년에 처음 결성하여 2007년 최초 회담을 열었으나, 이듬해인 2008년에 바로 해체되었다. 하지만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과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지역 안보 불안정성이 고조된 2017년에 재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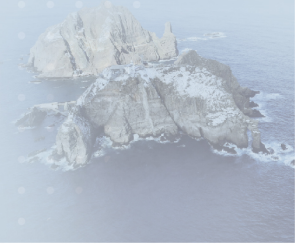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칙 기반 질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표방한다. 실질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및 경제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중국 또한 쿼드를, 자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아시아판 NATO’로 간주하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림 7. 쿼드 참가국인 인도·일본·호주·미국의 외교담당 수장(좌측부터)



그림 출처: Reuters(2024.7.29.)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은 현 국제정세에 대해 4개국에 ‘전례 없는 전략적 조정의 순간’이라고 강조하며, 쿼드 참가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어 있고 안전하며, 번영하고 회복력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한 공통의 비전으로



뭉쳐 있다”라고 말했다. 회의 후 호주의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 인도의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교장관, 일본의 요코 카미카와(Yoko Kamikawa) 외무대신,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히고, “지역의 해양안보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발표했다. 4명의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심각한 위협이 어떤 국가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쿼드 외교장관 회의 하루 전인 28일에 열린 미국과 일본의 2+2 안보회담(국방 및 외무장관 참석)에서 양국은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다. 미·일은 양자 안보회담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그림 8. 미국·호주·일본·인도 안보협의체, 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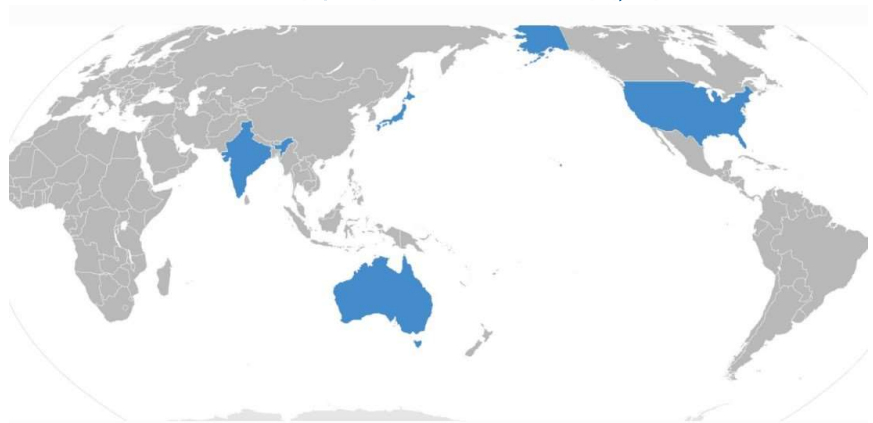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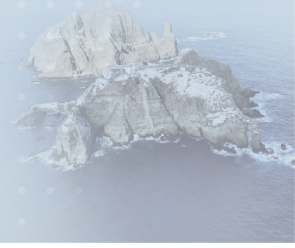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출처: CSIS(2020.3.16.)

쿼드, “해저케이블 보호,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계획

쿼드 4개국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사이버 안보와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이버 안보에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해저케이블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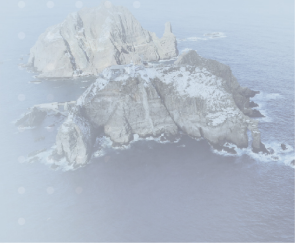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이 밖에 4개국 외교장관들은 ‘인도-태평양 해양영역인식(IPMDA: Indo-Pacific Maritime Domain Awareness)’의 협력 범위를 점차 인도양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 때 발표된 IPMDA 구상은 각 당사국 해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국의 MDA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4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양의 MDA 정보는 이 지역 해상 안보 센터인 인도 해군의 정보융합센터(Information Fusion Centre)와 협력하여 처리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의 전에 카밀 도슨(Camille Dawson)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영역인식(MDA)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 쿼드 국가와 역내 파트너들이 협력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쿼드의 협력 국가 범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도슨 부차관보는 한국이 쿼드 워킹그룹의 일부 특정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인 미래 파트너라고 밝혔다.

- 출처 : [1] CSIS(2020.3.16.), Defining the Diamo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https://www.csis.org/analysis/defining-diamond-past-present-and-future-quadrilateral-security-dialogue>
- [2] Nikkei Asia(2024.7.29.), Quad countries agree to expand Indo-Pacific cyber, maritime initiatives,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Quad-countries-agree-to-expand-Indo-Pacific-cyber-maritime-initiatives>
- [3] Reuters(2024.7.29.), Quad foreign ministers decry dangerous South China Sea action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quad-foreign-ministers-meet-tokyo-talks-maritime-security-cyber-2024-07-29/>
- [4] U.S. Department of State(2024.7.23.), Quad Foreign Ministers' Meeting, <https://www.state.gov/briefings-foreign-press-centers/quad-foreign-ministers-meeting>
- [5] U.S. Department of State(2024.7.28.),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 <https://www.state.gov/joint-statement-of-the-security-consultative-committee-22-2/>



아프리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전문연구원 김 지 혜

바다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싼 소말리아-에티오피아 갈등, 튀르키예가 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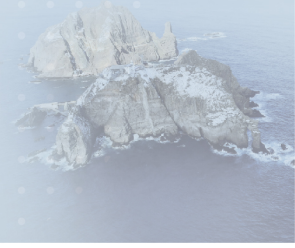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지난 7월 3일 튀르키예의 중재로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간 소말릴란드(Somaliland)를 둘러싼 외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1월 1일 에티오피아가 분리 독립을 선언한 소말릴란드와 항만 임대에 관한 MoU를 체결하면서 촉발된 갈등에 대해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의 불안정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기로 약속했으며, 제2차 회의를 9월 튀르키예에서 가질 예정이다.

그림 9. 소말리아-에티오피아 간 MoU 체결식



사진 출처: Middle East Monitor

지난 1월 에티오피아와 소말릴란드가 체결한 MoU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서로 내용을 달리 밝힌 부분이 있어 명확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소말릴란드는 향후 50년간 베르베라 항만 주변 20km 길이의 해안선을 에티오피아가 상업적 및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해주기로 합의했다. 에티오피아는 그곳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신 에티오피아는 자국 국영기업인 에티오피아 항공에 대한 지분 일부를 소말릴란드에게 줄 것을 약속하고, 소말릴란드를 독립한 주권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만약



에티오피아가 이를 인정할 경우 소말릴란드를 주권국가로 인정한 첫 유엔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현재 소말리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소말릴란드를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소말리아의 한 자치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릴란드가 MoU를 체결한 이후 소말리아 외 이집트, 중국 등의 국가들도 해당 MoU를 즉각 비난하며, 소말릴란드와 체결한 MoU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말릴란드는 에티오피아에게 바다에 대한 접근을 임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말릴란드는 현재 어떠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미승인국가로 소말릴란드가 바다를 임대하거나 바다에 대한 주권적 접근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유효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그림 10. 북동부 아프리카 지역



사진 출처: Nationalia

에티오피아는 1993년 에리트레아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바다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으며, 이후 바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02년에는 지부티와의 협정을 체결하여 지부티 항만을 통한 대외 무역로를 확보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의 바다 접근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에티오피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만을 가지고자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 무력 이용도 고려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은 등 바다 접근에 대한 강력한 염원을 내비쳐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일 에티오피아는 소말릴란드와의 MoU 체결을 성사시킨 것이다.



특히 에티오피아 총리는 지난해 주변국들과 토지 임대, 항만 투자, 토지교환 등의 선택지를 제시하며 에티오피아가 홍해에 대한 바다 접근권을 더 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으나, 주변국들은 이에 대해 협상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말릴란드와의 MoU 체결 이후 소말리아 대통령은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의 영토 보전을 해치지 않겠다는 보장하에 소말리아를 통해 바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간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최소한 소말릴란드와의 MoU를 통해 주변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주요 무역로인 홍해의 진입로에 위치해 있는 이 중요한 지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섰지만, 2011년 수력 발전소 건설 사건 때처럼 에티오피아와 소말릴란드가 서로 원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MoU 이행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 출처 : [1] Modern Diplomacy, 2024년 7월 7일, Ethiopia's Risky Maritime Ambitions - Undermining International Law for Sea Access
[2] Nationalia, 2024년 1월 3일, Somaliland sees first recognition of independence closer
[3] The Conversation, 2024년 1월 11일, Ethiopia's quest for access to the sea: success rests on good relations with its neighbours
[4] MEMO, 2024년 7월 4일, Somalia, Ethiopia sign MoU to resolve diplomatic dispute under Türkiye's mediation



3개월 내 행사계획

제75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 2024년 7월 1일 ~ 8월 2일 / 제네바

- 주요 내용 Bogdan Aurescu(루마니아) 위원 사임에 따른 신규 위원 선출, 국제법위원회 창립 75주년 기념행사, '국가 책임에 관한 국가 승계', '국제법과 관련된 해수면 상승', '해상에서의 해적 행위 및 무장 강도의 예방 및 억제' 등 보고서 검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고위급 정치 포럼(ECOSOC) | 2024년 7월 8일 ~ 7월 18일 / 뉴욕

- 주요 내용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검토 및 글로벌 차원 후속 조치 논의

제61차 대륙붕한계위원회 | 2024년 7월 8일 ~ 8월 23일 / 뉴욕

- 주요 내용 신규 선출된 위원회 위원의 선언, 소위원회 및 기타 보조기관에 신규 위원 임명, 부분 수정안 검토(모리셔스, 팔라우, 포르투갈, 스페인, 쿠바, 모잠비크 등 제출분), 절차 규칙 개정,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등 검토

국제법평론회 국제법 캠프 | 2024년 7월 18일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요 내용 신기술과 인권 : 국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해양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제해양법

제24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 2024년 6월 1일 ~ 8월 31일 / 대한국제법학회

- 대학생 부문: 무력 충돌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 / 외교공관의 불가침성과 외교적 비호권
- 대학원생 부문: 무력 충돌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 / 해양에서의 법집행 활동과 국제법적 한계
-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기후변화와 국제법
- 주요 내용 ※ 대한국제법학회 홈페이지(www.ksil.or.kr)에서 참가 신청 및 제출
(참가 신청: 2024.6.1.~8.31. / 논문 제출 마감: 2024.10.13.)

2024년 하반기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 2024년 9월 4일 ~ 11월 27일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 강의 주제: 국제해양법과 현안 문제 강의(총 9강)
- 참여 대상: 국제해양법에 관심 있는 모든 대학(원)생 및 해양법·정책 유관기관 실무자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동아대 글로벌재난안전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참가 신청: 2024.8.7.~8.25.)
- 주요 내용

2024 제47회 해양법 및 정책 연례회의 | 2024년 9월 17일 ~ 20일 / 페루 리마

- 주요 내용 해양법정책컨퍼런스(COLP)에서 '남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의 해양 거버넌스'를 주제로 해양 거버넌스와 해양법의 새로운 발전, 현재 남태평양 지역의 과제와 기회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논의